

유로존 출범과 위기의 정치경제: 국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배병인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유로존(Euro-zone)은 달러화 중심의 패권적 국제 통화질서에 대한 수정주의적(revisionist) 대응으로써 출범하였다. 유로존은 경제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국제정치적인 구조물이며, 그런 이유로 현재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이 붕괴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유로존 붕괴 시나리오는 유로존이 이른바 최적통화지역으로서의 경제적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유로존이 그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출범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 통화질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동인에 기초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유로존 출범의 기초가 되는 이러한 정치적 동인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서 유로존의 붕괴 가능성은 지극히 낮으며, 현재의 위기는 오히려 유로존이 재정 통합을 비롯한 관련 영역에서 제도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주제어 유로존, 유럽통화체제(EMS), 유럽통화연합(EMU), 금융위기, 재정위기

I. 서론

그리스를 필두로 한 이른바 ‘PIIGS’ 국가들(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재정위기가 심화되면서 급기야 유로존(Euro-zone) 전체의 붕괴 또는 분열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출되고 있다. 특히 그리스의 준 국가부도 사태가 총파업과 총리 사임 등 국내 정치적인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그 해결 전망이 모호한 가운데, 이탈리아의 공공부채가 1조 9,000억 유로(한화 약 3,0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뉴욕대학의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 교수는 유로존의 해체 이외에는 현재의 대규모 위기를 극복할 다른 방도가 없다는 주장을 내놓기에 이르렀다(Roubini, 2011). 거듭되는 경제위기로 유로존 국가들 사이의 갈등도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 지난 11월 8일에는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유럽연합을 경제적 우등국과 열등국의 이원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연합뉴스 11/11/11). 이러한 발언은 유로존을 이끌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가 향후 유로존 내부의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을 암시하는 것으로 읽혀져 유로존의 분열이 기정사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기도 했다.

유로존 붕괴 또는 해체 시나리오는 당면한 위기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유로존 출범 당시부터 지적되었던 유로존의 태생적 한계라는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유로존은 출범 당시부터 이른바 ‘최적통화지역(OCA: Optimal Currency Area)’ 이론의 관점에서 단일통화권으로서의 경제적 필요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왔다. 이 이론의 관점에서 단일통화권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무역의존도가 높고 경기순환 주기가 유사하며 노동력의 이동성이 높은 국가들 사이에 단일통화권이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유로존의 경우 무역의존도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Eichengreen, 1990; Wihlborg and Willett, 1992). 더구나 통화정책과 달리 유로존 공동의 재정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경기순환 주기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비대칭적 충격(asymmetric shock)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점이자 한계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위기는 이미 오래전에 지적되었던 유로존의 구조적 한계가 현실로 확인되고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당면한 위기의 심각성이라는 측면에서 유로존 붕괴 또는 해체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유로존 붕괴 또는 해체 시나리오에 대한 일종의 반론이다. 유로존 붕괴 또는 해체 시나리오와 그 근거가 되는 유로존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지적은 역설적으로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을 전격적으로 출범시킨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유로존을 탄생시킨 유럽통화연합(EMU: European Monetary Union)의 결성은 경제 통합의 최종적 완성이라는 경제적인 내용을 기초로 한 것이었지만, 그 주요 목표와 동력은 경제적인 것을 넘어서는 정치적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특히 유로존의 출범은 달러화 중심의 패권적 국제 통화질서에 대한 수정주의적(revisionist) 대응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가 향유하는 패권적 지위로부터 유럽 국가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유로화를 달러화에 대항하는 새로운 기축통화로 성장시킴으로써 국제 통화질서의 패권체제 자체를 전환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그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은 출범했던 것이며, 그 탄생의 비밀이 여전히 유효한 한에서 현재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해체가 아닌 제도적 진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 전망할 수 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우선 II절에서는 현재 유로존 위기의 성격과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III절은 유로존의 출범을 가능하게 했던 유럽통화 통합의 역사를 국제 통화질서의 패권 체계에 대한 수정주의적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기술하고 IV절은 유로존의 향후 전망에 대해 간략히 논의한다.

II. 유로존 위기의 성격과 전개 과정

현재의 유로존 위기는 지난 2007년 여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와 2008년 9월의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을 기점으로 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연장선에 위치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만 해도 유럽의 정치지도자들과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 유럽연합 집행위원회(the Commission of the EU) 등은 유럽이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부터 자유로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미국 금융위기의 여파로 유럽의 금융권이 단기적인 유동성 압박을 받겠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며, 유로화의 급격한 평가절상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제어하기 위한 통화수급 정책의 조절로 충분히 제어 가능한 위기라고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다(Dabrowski, 2009: 14-15).

그러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2008년 9월 이후 영국의 브래드포드 앤 빈글리(Bradford and Bingley), 아일랜드의 앵글로 아이리쉬(Anglo Irish Bank), 덴마크의 피오니아(Fionia Bank) 등을 비롯한 유럽의 대다수 상업은행들이 급격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면서 유럽에 금융위기의 서막이 오르게 된다. 유럽의 상업은행이 직면한 유동성 위기는 정부의 대규모 긴급 구제금융으로 이어졌고, 애초의 기대와 달리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를 포함한 경제의 총체적인 위기로 발전하는 과정을 밟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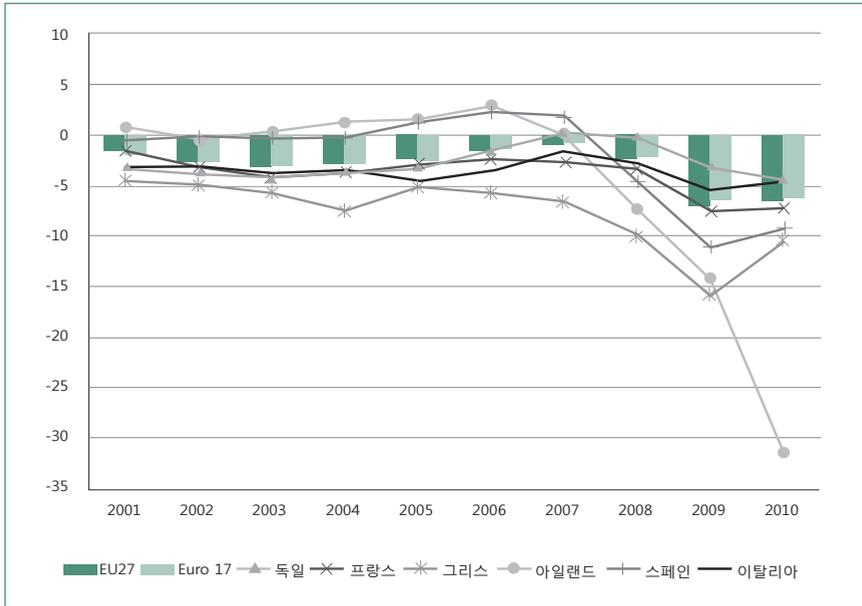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유럽이 금융위기의 소용돌이에 빠진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금융 파생상품을 매개로 복잡

하게 얽혀 있는 국제금융네트워크를 통해 유럽에 직수입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유럽의 많은 은행들이 미국의 부실 금융자산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고, 그렇지 않은 유럽계 은행 또한 미국을 비롯한 해외 지사의 대출 부실이 역수입되면서 유동성 압박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유럽 금융위기의 일차적인 원인이라면 두 번째는 유럽 내부의 거품 경제 확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영국과 아일랜드, 스페인 등의 서유럽 국가들과 동유럽 국가들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만연해 있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유럽의 부동산 거품이 동반 붕괴하면서 금융권의 유동성 위기가 본격화되었던 것이다. 특히 국제적으로 과잉 공급된 유동성을 조달하여 거품 경제에 참여했던 민간 부문들이 이로 인해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본격화된 유럽 금융권의 유동성 위기는 점차 재정 위기와 실물경제의 위기로 발전해 갔다. 민간 은행의 유동성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유럽의 국가들은 서둘러 금융권에 대한 구제금융을 제공하였고, 그 규모가 애초의 예상과 달리 엄청난 수준에 달하면서 재정 불균형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다. 금융권에 대한 대규모 구제금융과 그에 따른 재정 불균형은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져 2008년 4/4분기 이후 산업 생산성의 둔화와 실업률의 증가 경향이 뚜렷해졌다. 2009년도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은 -4.2%였고, 2010년에는 1.8%에 그쳤다. 이와 함께 2008년 하반기에 약 8%에 달하던 유로존 전체의 실업률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10년 이후에는 1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PIIGS 국가들의 실업률이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금년도 그리스의 실업률은 17.6%, 스페인은 22.6%, 아일랜드는 14%대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실물경제의 위기는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2008년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감소세를 보이던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 적자율은 2009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까지 유로존의 평균 재정 적자율은 이른바 ‘안정과 성장을 위한 협약(the Stability and Growth Pact)’에서 결정한 재정 적자 상한선인 GDP의 3% 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2009년 이후 평균 재정 적자율이



출처: Eurostat(<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eurostat/home>)

그림 1 유로존 주요 국가의 재정 적자 추이

6%를 상회하게 되었고, PIIGS 국가들의 재정 적자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향후 재정 적자 규모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09년에 그리스와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의 재정 적자가 GDP의 10% 대를 넘어 썼고, 2010년에는 특히 아일랜드의 재정 적자가 GDP의 31.3%에 달하게 되면서 유로존 전체의 재정 적자 규모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국가들의 심각한 재정위기는 거품 경제의 붕괴에 따른 금융권의 부실과 국제 금융 규제의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009년 그리스 사태가 불거질 당시 고임금과 과도한 사회복지 지출 등과 같은 이른바 ‘도덕적 해이론’에 바탕을 둔 재정 부실을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이는 그리스의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여타 국가에 비해 그리 높지 않다는 점과,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흥미로운 것은 현재 유로존 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PIIGS 국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발 이전에는 새로운 성장 모델로서 주목받고 있

었다는 점이다. 그리스 사태에 묻힌 감이 있지만, 향후 유로존 위기의 복병으로 등장할 아일랜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재의 재정위기는 금융권의 부실 자산 인수에 따른 재정 지출의 급격한 증가에서 그 일차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거품 경제의 붕괴는 재정 수입의 감소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부실 자산의 인수에 소요되는 재정 지출 비용을 급격히 증대시킴으로써 재정 불균형과 재정위기를 낳게 된 것이다. 그리스를 필두로 한 PIIGS 국가들에서 재정위기가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유로존의 출범 이후 이들 국가들로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면서 거품 경제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따라서 거품의 붕괴에 따른 재정 압박이 여타 국가들에 비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금융권에 대한 대규모 유동성 지원으로 기사화생한 국제 금융자본이 그 투기적 성격을 제어할 규제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투기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현재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¹ 적어도 2009년 4월의 G-20 정상회의 이후 국제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책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아직 그 틀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 금융자본의 투기적 행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08년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던 원인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국제자본의 투기적 행태는 부실 금융자산을 지속적으로 양산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단기 유동성 지원의 규모를 늘리고 있다. 일종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유로존에서 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유로존의 구조적인 한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유로존은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와 '가격 안정성(price stability)'에 주안점을 둔 유럽중앙은행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적통화지역 이론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단일통화권 내부의 비대칭적 경제 충격에 대처할 수 있는 경제적, 제도적 여건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¹ 현재의 유로존 위기를 바라보는 유럽의 시각은 국제자본에 대한 규제 부재가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의 정치지도자들과 주요 기구들이 일관되게 견지해 온 관점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조홍식(2010: 12-14) 참조.

특히 단일한 통화정책에 대비되는 단일한 재정정책의 부재가 중요한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유로존의 경제 구성상 비대칭적 경제 충격의 자연적 해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 기금과 재정정책을 통한 대비가 필수적인데 이것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1997년 체결된 ‘안정과 성장을 위한 협약’은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유로존 전체를 관장하는 대규모 재정 기금과 재정 정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로화와 유로존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각자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유로존 회원국의 재정 적자 규모는 GDP의 3% 이내, 공공부채는 60% 이내로 제한하는 협약이 완성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협약은 출범 당시부터 유로존의 구조적 한계를 대체할 만한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점과 유로존의 구성 이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제어할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특히 2008년 이후 현재에 이르는 상황과 같이 대규모의 금융위기가 닥칠 경우 이 협약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의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취약한 대책이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가 유로존 전체의 가격 안정성과 유로화의 대외적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도록 명문화되어 있다는 점 또한 구조적 취약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유로화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불가피한데, 이는 통화 공급의 증대를 통한 경기 부양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로화의 가치 보전에 초점을 맞추는 통화정책 기조는 현재와 같이 유로존이 총체적인 경제적 난국에 직면해 있는 경우 유로화의 평가절하를 기대하는 투기적 공격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위기를 가속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유럽의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루비니 교수를 비롯한 많은 경제학자들이 현재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유로화의 가치 절하 외에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다(Roubini, 2011).

그러나 유로존의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은 조약의 개정에 관련된 것으로서 현재로는 그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마찬가지로 이

를 대체할 대규모 재정기금을 마련하는 것 또한 2010년 이후 유럽재정안정 기금(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과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uropean Financial Stabilization Mechanism)을 통해 어느 정도 현실화되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유로존의 위기가 유로존의 붕괴 또는 해체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해석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III. 유로존 출범의 국제 정치

유로존의 위기는 유로존 내부의 구조적 취약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이로부터 유로존 위기의 향후 전망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이 출범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유로존의 출범은 1970년대 이후 유럽 통화 통합의 역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그 기저에는 국제정치적 수준에서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정치적 판단과 고려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로존은 그 구조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출범했던 것이며, 이것이 유로존 붕괴 시나리오의 타당성을 의심하게 하는 주요 이유이다.

유럽통화연합(EMU)의 출범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유럽 내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86년 단일유럽협약에 의한 유럽단일시장의 출범에 따른 효과와 유럽연합 초국가기구들의 규정적인 역할(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y, 1990; Sandholtz, 1993), 1980년대를 통틀어 독일 모델을 중심으로 한 통화주의적 통화정책으로의 수렴(McNamara, 1998) 등이 유로존 출범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유럽의 통화 통합 과정을 추동한 것은 국제정치적인 요인, 특히 국제 통화질서의 패권 체계에 대한 수정주의적 대응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이다. 유로존의 출범과 그 이전 시기의 통화협력의 역사는 이러한 ‘체제적 맥락성(systemic contextuality)’이 규정하는 정치적인 조건에 의해 추동되어 왔다(Henning, 1998).

유로존 출범의 기초가 된 체제적 맥락성은 기축통화 중심의 패권적 국제 통화질서가 야기하는 거시경제적 효과와 관련된다. 국제 통화질서에서 기축통화

는 한편에서 국제적 결제 수단으로 기능하지만 동시에 특정 국가의 공식 통화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는다. 국제 결제 수단으로서의 기축통화는 이른바 ‘패권안정이론(hegemonic stability theory)’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제 통상과 경제 질서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Kindleberger, 1972, 1973), 이는 기축통화국의 거시경제 정책이 국제 통화질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기축통화국이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국제 경제 질서를 변화시키고자 하거나 또는 적어도 체제의 안정성이라는 목표를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함으로써 안정성 유지 비용을 사실상 여타 국가들에게 전가할 경우 국제 경제체제의 불안정성은 불가피해진다.²

기축통화를 보유한 국제 통화질서의 패권국은 그 지위로 인해 여타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의 거시경제적 자율성을 향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국가들은 패권국의 거시경제 정책이 야기하는 부정적인 효과에 어떤 형태로든 반응해야 한다. 그 하나가 패권국이 요구하는 정책 조정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라면, 다른 하나는 패권국에서 유래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소규모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패권국의 일방적인 거시경제 정책으로 인해 특정 국가군의 상호 경제 관계가 불안정해질 때, 협력 체제를 통해 패권국의 독주를 공동 견제하거나 또는 제어하려는 동기가 더욱 커지게 된다. 패권적 국제 통화질서의 내부에서 지역 단위의 통화협력 체제가 모색되는 것은 이러한 동기에 바탕을 둔 것이다(Henning, 1998: 545).

유로존의 출범을 낳은 유럽통화협력체제의 등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유럽 국가들이 유럽 차원에서의 소규모 통화협력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 ‘베르너 보고서(Werner Report)’를 작성하면서부터이다. 1969년 당시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y) 국가들의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그 작성이 결정된 이 보고서는, 1980년까지 유럽공동체 국가들의 완전한 통화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비록 이

² 패권안정이론에서 패권국은 체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자애적(benevolent)’ 지도자와 패권적 지위를 이용해 여타 국가를 착취하는 ‘약탈적(predatory)’ 독재자라는 상호모순적인 방식으로 전제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상의 문제와 그것이 야기하는 이론적 문제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는 Gowa(1989)와 Snidal(1985)을 참조하라.

보고서가 설정한 목표 시점에 맞춰 유럽통화 통합이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그 역사적 의미는 퇴색하였지만, 이 보고서가 제시한 통화 통합의 주요 원칙과 정책 과제들은 1991년 마스트리히트 조약(the Maastricht Treaty)을 통해 유럽통화연합이 출범할 당시 거의 대부분 그대로 반영됨으로써 오늘날 유로존 출범의 초석을 닦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Baer and Padoa-Schioppa, 1989).

베르너 보고서의 작성으로 유럽통화 통합에 대한 모색이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 중반 이후 국제통화체제의 운영을 둘러싸고 불거진 미국과 유럽 사이의 갈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당시 국제 통화질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재건에 필수적인 통화 유동성을 달러화 중심의 고정환율제를 통해 공급하고자 수립된 브레튼우즈 체제(the Bretton Woods System)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이 체제는 유럽 국가들이 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 속에서 급속하게 경제를 재건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지만, 이른바 ‘트리핀의 딜레마(Triffin's Dilemma)’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국제적인 유동성 공급과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에 대한 신뢰성 사이의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체제였다. 국제 통화질서의 안정을 위해서는 달러화가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면서 국제 결제 수단으로서 세계 경제에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해야 하는 다소 모순적인 정책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야만 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체제의 안정성은 미국이 기축 통화국으로서 국제적인 유동성 공급이 야기할 수 있는 달러화의 가치 하락을 국내 거시경제 정책의 조정을 통해 방지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었다. 1960년대 초반까지 이러한 정책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되는 듯했으나, 1966년 이후 점차 브레튼우즈 체제에 내재한 모순이 현실화되면서 국제적인 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한다. 이 시기 미국은 국내외적인 이유로 팽창적인 거시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인플레이션과 경상 수지 악화를 낳아 결과적으로 달러화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킴으로써 브레튼우즈 체제의 근간이었던 고정환율제를 일대 혼란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여타 국가들, 특히 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인 외환시장 개입과 거시경제 정책 조정을 통해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국제 통화질서 내에서의 균열이 야기되었다(Henning, 1998: 553-554).

베르너 보고서의 작성과 유럽통화 통합의 모색은 이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특히 미국의 직접적인 압력에 시달리고 있던 독일이 유럽통화 통합에 적극적이었는데, 이는 여타 유럽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미국의 압력이 야기하는 거시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장기적으로 달러화 중심의 패권적 국제 통화질서가 야기하는 경제적 교란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Hoffmeyer, 1992: 194; Solomon, 1982: 100-172). 비록 독일이 의도한 바대로 유럽통화 통합이 현실화되지는 못했지만, 이로써 “1957년 로마 조약 체결 당시에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유럽의 독자적인 통화협력체제”에 대한 모색이 본격화될 수 있었다(Tsoukalis, 1977: 52).

유럽의 독자적인 통화협력 체제는 1971년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이후 등장한 ‘스네이크 체제(the Snake System)’를 통해 최초로 현실화되었다. 스네이크 체제는 유럽 통화 사이에 느슨하나마 고정환율제를 구축함으로써 달러화에 대한 공동 변동 환율을 유지하고, 유럽통화협력기금(the European Monetary Cooperation Fund)을 설치하여 역내 통화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체제였다. 1971년 미국 정부의 금태환 정치 선언과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로 야기된 국제 통화질서의 일대 혼란은 달러화의 평가절하와 유럽 통화의 상대적 평가절상으로 인해 유럽의 대미 수출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한편, 자본 유입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상황은 유럽 국가들로 하여금 이미 독일이 제안한 바 있는 유럽의 독자적인 통화협력 체제에 대한 모색을 본격화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가 스네이크 체제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스네이크 체제는 유럽 최초의 독자적인 통화협력 체제라는 의미에 필적할 만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비롯한 회원국들의 이탈이 빈번했고, 고정환율제가 유명무실화됨으로써 사실상 실패한 실험으로 끝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내내 반복된 국제 통화질서의 교란은 유럽 국가들이 스네이크 체제를 뛰어 넘는 새로운 형태의 통화협력을 모색하도록 하는 기초가 되었고, 1979년 3월 ‘유럽통화체제(EMS: the European Monetary System)’의 출범과 더불어 마침내 그 결실을 보게 된다. 유럽통화체제는 그 내용 면에서 스네이크 체제와 사실상 동일하나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회원국들의 정치적 의지에 기초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유로존 출범의 초석을 닦게 된다.

유럽통화체제는 1978년 독일의 슈미트(Helmut Schmidt) 수상과 프랑스의 데스탕(Giscard d'Estaing) 대통령 사이의 정상회담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독일은 1960년대 후반과 마찬가지로 달러화의 평가절하와 그에 따른 자본 유입으로 만성적인 경제적 교란에 시달리고 있었다. 독일의 슈미트 수상은 패권적 지위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일방적인 거시경제 정책 운용이 야기하는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달러화에 대한 유럽의 종속성을 탈피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Fratianni and von Hagen, 1992: 45). 스네이크 체제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이는 스네이크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통화협력체제의 구축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유럽통합의 또 다른 한 축을 구성하는 프랑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프랑스 또한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달러화 중심의 국제 통화질서로부터 독립적인, 유럽의 독자적인 통화협력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도달하고 있었다. 이는 프랑스가 달러화의 가치 하락과 미국의 일방적인 거시경제 정책 운용에 따른 경제적 비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과 국제 통화질서의 교란으로 인해 유럽공동체를 주축으로 한 유럽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관계와 통합 노력이 위협받고 있었다는 데 기인한다. 유럽공동체를 통한 유럽통합 노력의 진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유럽 국가들 사이의 통화협력이 절실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1978년 프랑스와 독일의 정상회담에서 유럽통화체제의 출범이 합의되었으며, 양 정상은 합의가 같은 해 12월 유럽공동체의 브뤼셀 정상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됨으로써 스네이크 체제에 뒤이은 유럽의 독자적인 통화협력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스네이크 체제와 마찬가지로 유럽통화체제 또한 패권적 국제 통화질서에 대한 수정주의적 대응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달러화 중심의 국제 통화질서가 야기하는 경제적 교란을 유럽 지역 단위의 협력을 통해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달러화로부터 독립된 유럽의 독자적인 통화지대를 창설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유럽통화체제의 성패 여부는 통화협력에 대한 회원국들의 확고한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었다. 스네이크 체제가 회원국들의 빈번한 이탈로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은 유럽의 독자적인 통화협력체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정치적 의지가 부족한 탓이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이 스네이크 체제와 달리 유럽통화체제가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유럽통화체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확고한 정치적 의지는 1980년대와 1990년대를 통틀어 회원국 지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유럽 통화체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고정환율제가 거시경제 정책의 수렴을 바탕으로 안착되었던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럽통화체제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웅변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 1983년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의 이른바 ‘대전환’이다. 1981년 이후 팽창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해 오던 미테랑 대통령은 그로 인한 프랑화의 평가절하 압력 속에서 기존의 정책 기조를 포기하는 대신 유럽통화체제를 고수하는 정치적 선택을 감행함으로써 유럽통화체제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유럽통화체제에 대한 확고한 정치적 의지는 거시경제 정책의 수렴으로 이어져 1980년대를 통해 회원국 물가 상승률의 평균과 표준편차 모두 하향 평준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이는 회원국 통화의 환율 변동 폭을 감소시킴으로써 결국 유럽통화체제가 독자적인 통화협력체제로 안착하는 기초가 되었다(Ungerer, 1997: 169-183). 유럽통화체제를 통한 환율 안정과 거시경제 정책의 수렴은 1970년대 내내 지지부진했던 유럽의 경제통합이 재가동되는 계기가 되었다. 유럽단일시장을 출범시킨 1986년의 단일유럽협약(the Single European Act)과 유로존의 출범을 공식화한 1991년의 마스트리히트 조약 모두 유럽통화체제의 성공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유럽통화체제에 뒤이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체결은 역설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당시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유럽통화체제를 서둘러 단일통화체제로 전환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단일통화권에 대한 모색이 유럽통화체제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에 전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과 통화협력의 목표라는 점에 비추어 단일통화권이 유럽통화체제에 비해 효율적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다는 데 기인한다(Sandholtz, 1993: 11-14).

유럽통화연합으로 대변되는 단일통화권은 유럽통화체제와 비교하여 회원국 통화 사이의 환율이 비가역적으로 고정되고 역내 자본 이동성의 완전한 자유가 보장된다는 데 그 제도적 특징이 있다. 유럽통화체제는 고정환율제라 하더라도 환율의 상호 조정이 가능한 체제였고, 통화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자본 통제 정

책을 허용하고 있었다. 단일통화체제는 이 두 가지 정책 수단 모두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먼델-플레밍(Mundell-Fleming)의 ‘삼위일체 공리(the unholy trinity theorem)’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개별 국가의 통화 주권을 제한하는 제도이다(Mundell, 1961, 1962; Fleming, 1962).

단일통화체제의 이러한 특성은 한편으로 환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항구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경제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갖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통화 주권의 박탈로 인해 개별 국가가 고유한 경제적 충격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상실하게 된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이른바 최적통화지역 이론은 경기순환 주기가 유사하고 노동력을 비롯한 생산 요소의 이동성이 높은 국가들 사이의 단일통화권 형성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유럽통화연합이 공식적으로 결정될 당시 유럽 국가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경제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경기순환 주기의 연관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무엇보다 노동력의 이동성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로 인해 유럽통화연합을 통한 단일통화권의 출범보다는 기존의 유럽통화체제와 같이 보다 느슨한 형태의 통화협력체제가 바람직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Eichengreen, 1990; Wihlborg and Willett, 1992).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통화연합이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은 그 동인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다.³

유로존 출범이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은 역설적으로 유럽통화체제의 공고화에 그 원인이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유럽통화체제가 공고화된 것은 달러화로부터 독립적인 통화안정지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유럽 국가들의 정치적 의지가 확고한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1980년대 내내 지속된 미국의 만성적인 쌍둥이 적자와 그에 따른 유럽 국가들의 경제적 교란은 유럽통화체제를 통해 패권적 국제 통화질서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의 기초가 되었다. 그런데 정치적 의지에 기초한 유럽통화체제의 공고화는 독일의 강한 마르크화와

³ 유럽통화연합의 출범이 자본 이동성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유럽단일시장과 유럽통화체제가 충돌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설명도 있으나(Padoa-Schioppa, 1988), 이는 유럽공동체의 자본 자유화 조치와 유럽통화연합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1988년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하겠다.

여타 통화 사이의 ‘비대칭성(asymmetry)’으로 인해 유럽 국가들 사이의 갈등이 촉발되는 계기가 되었다. 마르크화의 고평가가 유럽통화체제의 고정환율제를 통해 여타 국가들로 분산됨으로써 약한 통화를 보유한 국가들이 경제적 가용치를 넘어서는 통화의 고평가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Henning, 1998: 561-564).

마르크화의 강제 속에서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약한 통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선택지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고평가된 마르크화를 반영하여 유럽통화체제 내에서 환율을 재조정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독일의 엄격한 통화정책으로 수렴함으로써 통화의 비대칭성을 대내적으로 해소하는 것이었다. 전자의 선택은 약한 통화 국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는 있으나 빈번한 환율조정으로 유럽통화체제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문제시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유럽통화체제의 공고화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확고한 상황에서 약한 통화 국가들이 선택한 것은 결국 ‘경쟁적 물가통제(competitive disinflation)’ 정책을 통해 가격안정성을 기초로 하는 독일의 엄격한 통화정책으로 수렴하는 것이었다(Walsh, 2000: 124-125).⁴

이러한 거시경제적 수렴은 유럽통화체제를 공고히 하는 기초로 작동하였지만, 다른 한편 유럽통화체제에 중언을 고하게 되는 두 가지 정치적 문제를 잉태하게 하였다. 첫째 문제는 경쟁적 물가통제 정책을 통한 독일 모델로의 수렴으로 인해 유럽통화체제 내에서 독일의 지배력이 공고화되고 체제의 비대칭성이 오히려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독일 모델로 수렴될수록 독일의 통화정책이 유럽통화체제 전체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구조가 공고화되었던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경쟁적 물가통제 정책이 약한 통화 국가들 내부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정치적 갈등과 논란을 증폭시켰다는 점이다. 약한 통화 국가의 입장에서 독일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가격통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이는 성장과 고용의 둔화라는 부정적인 효과로 인해 통화정책에 대한 정

⁴ 경쟁적 물가통제 정책으로의 수렴은 유럽통화체제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바람직한 경제정책 모델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수렴의 결과이기도 하다. 1980년대에 유럽의 정치지도자들은 신고전파 경제학의 통화주의 이론에 기초한 신자유주의 정책 모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고, 이것이 경쟁적 물가통제 정책에 대한 수렴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McNamara(1998)를 참조하라.

치적 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유럽통화연합의 출범이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은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의 약한 통화 국가들이 단일통화를 통해 이러한 두 가지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1988년 당시 프랑스 재무장관 발라뒤(*Edouard Balladur*)가 유럽통화연합으로의 이행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 것은 이러한 사정에 기초한 것이었다. 유럽통화체제에 내재한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대내적으로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는 통화정책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단일통화를 통해 독일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통화정책을 유럽적 차원에서 공고히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McNamara, 1998; Walsh, 2000).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약한 통화 국가의 입장에서 단일통화권의 출범은 소위 ‘발언권 가설(*the voice opportunity hypothesis*)’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통화정책에 대한 공동 결정권을 확보함으로써 독일의 일방적인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Grieco, 1995). 다른 한편 단일통화권의 출범에 필수적인 유럽의 단일한 통화정책은 가격안정성을 기조로 하는 통화정책에 대한 일종의 ‘외부로부터의 속박(*vincolo esterno, external tie*)’으로 기능하여 국내의 정치적 논란과 장애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Dyson and Fetherstone, 1996).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합의된 유럽통화연합의 최종안은 1988년 발라뒤의 제안 이후 지속된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줄다리기와 독일 통일이라는 특수한 정치적 요소가 결합되면서 마침내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10여 년에 걸친 준비 기간을 거쳐 2002년에 유로화가 유럽통화연합 회원국 전체의 통화를 대체함으로써 오늘날의 유로존이 탄생하게 된다. 단일통화권으로서의 구조적인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유럽통화연합의 출범이 가능했던 것은 달러화 중심의 패권적 국제 통화질서로부터 독립된 유럽의 통화안정 지대를 창설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적 의지는 유로존의 전신인 유럽통화체제를 공고화시키는 한편, 그 과정에서 야기된 유럽 국가들 사이의 정치적 갈등을 유럽통화연합으로의 제도적 진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기초가 되었다.

IV. 유로존의 향후 전망

유럽통화 통합의 역사는 국제 통화질서의 패권 체제를 수정하고자 하는 정치적 동인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노정된 유럽 국가들 사이의 갈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진화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유로존 위기 또한 과거의 역사적 경험에 그러했듯이 유로존 붕괴 또는 해체라는 극단적인 형태가 아니라 유로존 내부에서의 제도적 진화로 발전해 갈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경제 우등국과 열등국의 이원 체제로 유로존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나,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유럽연합 조약의 개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연합뉴스 11/11/11) 등은 유로존 해체 또는 붕괴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진화의 신호탄을 올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유로존의 향후 진화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전망해 볼 수 있다. 우선은 유로존의 구조적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일 통화 정책에 조응하는 재정정책 또는 재정 관련 제도를 구비할 가능성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2010년 이후 유럽재정안정기금의 마련과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의 도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이미 그 첫 발을 내디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방안은 2008년 12월 브뤼셀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유럽경제복구계획(the European Economic Recovery Plan)’에 기초하고 있다. 유럽경제복구계획은 당시 유럽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회원국 차원의 금융구제 프로그램을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고, 금융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유럽연합 차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유럽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와 관리 모델을 개발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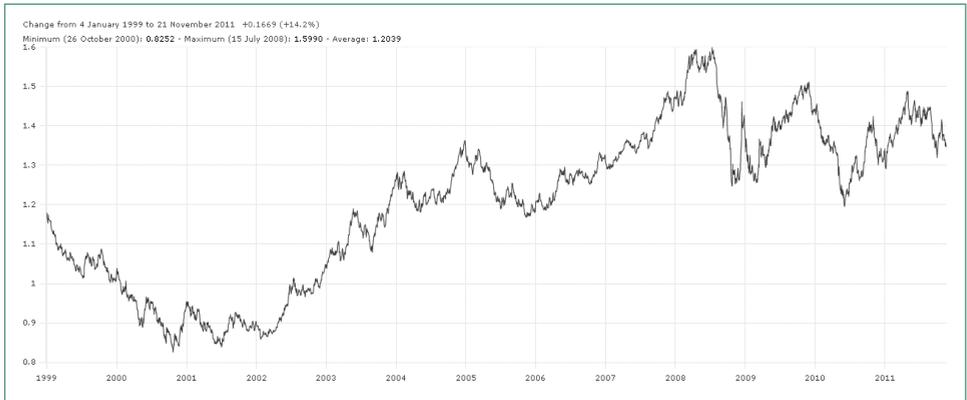
유럽경제복구계획은 유럽단일시장과 유럽통화연합의 출범으로 금기시되었던 회원국들의 자국 기업과 금융 기관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는 점과 유럽연합 차원의 재정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2008년 12월과 2009년 3월의 유럽정상회의에서는 당초 유럽연합 전체 GDP의 1%에 불과하던 유럽연합 예산을 약 3.3%에 이르는 4,400억 유로 규모로 끌어 올려 이를 회원국에 대한 재정지원금

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은 애초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유럽연합 예산의 재배치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었고, 특히 은행과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을 배제하고 있었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었다 (배병인, 2009: 103-105).

유럽경제복구계획의 수립 당시 금융위기의 해소를 위한 별도의 기금을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회원국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9년 그리스 사태와 뒤이은 유로존 전체의 재정위기로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금융 및 재정위기의 해소를 위한 유럽재정안정기금의 확충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비록 현재의 위기가 구조적이고 대규모라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회의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향후 회원국의 재정 지원을 위한 기금의 확충과 운영이라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이것이 단일한 통화정책에 버금가는 재정 통합이나 공동의 재정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재정 통합을 위해 필요한 유로존 국가들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유로존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재정 통합이 될 경우 회원국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유로존을 이끌고 있는 독일이 후자의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 통합의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인다. 재정 통합의 문제가 특히 민감한 것은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가격 안정성을 기조로 한 유로존의 통화정책 조정이 불가피해지고 이로 인해 유로화의 국제적 지위와 위상이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로존의 위기가 본격화된 2009년 이후 유로화의 대달러화 가치는 심한 등락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애초 1.17달러 수준에서 출범한 유로화의 가치는 2008년 하반기에 1.59달러에 이르렀다가 이후 하락세와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1년 11월 현재 1.34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는 유로화에 대한 신뢰 하락에도 불구하고 달러화와의 경쟁에서 아직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가격안정성을 기조로 한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출처: 유럽중앙은행(<http://www.ecb.int/home/html/index.en.html>)

그림 2 유로 대 달러 환율의 변화, 1999년 1월~2011년 11월

이었다. 유로존 내부의 경제안정이라는 목표보다 유로화의 국제 통화질서에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유로존 출범의 주요한 요인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프랑스와 독일을 주축으로 유로존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수혜국가의 긴축재정을 강조하는 방식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한 두 번째 진화의 가능성은 그 방향과 결과를 예측하기 불가능하지만 이른바 ‘사회적 유럽(social Europe)’의 문제와 관련된다.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을 보존하면서 유로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긴축재정에 대한 강조로 나타나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복지주의적 개입을 강조하는 흐름과 극우주의적인 정치 성향이 증폭되면서 상호 갈등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재 개별 국가 단위에서 전개되는 이러한 양상은 유로존과 유럽연합 전체의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정치적 갈등의 결과에 따라 유로존과 유럽연합 차원에서 ‘사회적 유럽’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와 정책이 진화할 수도 있고, 반대로 유로화와 공동의 통화정책을 제외한 여타 영역에서 공동의 통합적 정책보다는 회원국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그 방향을 예단할 수 없지만, 유로존의 금융 및 재정위기를 넘어서는

사회정치적 갈등이 향후 유로존 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투고일: 2011년 11월 24일 | 심사일: 2011년 12월 9일 | 게재확정일: 2011년 12월 13일

참고문헌

- 배병인. 2009. “글로벌 금융위기의 도전과 유럽연합의 대응.”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6호, 92-113.
- 조홍식. 2010. “유로화의 정치경제: 유로의 국제적 역할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제28권 제2호, 1-23.
- Baer, Gunter D. and Tommaso Padoa-Schioppa. 1989. “The Werner Report Revisited.” In Committee for the Study of Economic and Monetary Union. *Report o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in the European Community*. Luxembourg: Office of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y.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y. 1990. “One Market, One Money: An Evaluation of the Potential Benefits and Costs of Forming 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European Economy* 44.
- Dabrowski, Marek. 2009. *The Global Financial Crisis: Lessons for European Integration*. CASE Network Studies and Analyses, No. 384.
- Dyson, Kenneth H. F. and Kevin Featherstone. 1996. “Italy and EMU as a “Vincolo Esterno”: Empowering the Technocrats, Transforming the State.” *South European Society and Politics* 1(2), 272-299.
- Eichengreen, Barry. 1990. “One Money for Europe? Lessons from the U.S. Currency Union.” *Economic Policy* 5(10), 117-187.
- European Central Bank. <http://www.ecb.int/home/html/index.en.html> (검색일: 2011. 12. 20).
- Eurostat.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eurostat/home> (검색일: 2011. 12. 20).
- Fleming, J. Marcus. 1962. “Domestic Financial Policies under Fixed and Floating Exchange Rates.” *IMF Staff Papers* 3(9), 369-379.

- Fratianni, Michele, and Jürgen von Hagen. 1992. *The European Monetary System and European Monetary Union*.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 Gowa, Joanne. 1989. "Rational Hegemons, Excludable Goods, and Small Groups: An Epitaph for Hegemonic Stability Theory?" *World Politics* 41(3), 307-324.
- Grieco, Joseph. 1995. "The Maastricht Treaty, Economic and Monetary Union and the Neo-Realist Research Programme."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1(1), 21-40.
- Henning, C. Randall. 1998. "Systemic Conflict and Regional Monetary Integration: The Case of Europe." *International Organization* 52(3), 537-573.
- Hoffmeyer, Erik. 1992.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An Essay in Interpretation*. Amsterdam: North-Holland.
- Kindleberger, Charles P. 1972. "The Benefits of International Mone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2(4), 425-442.
- _____. 1973. *The World in Depression: 1929-1939*.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cNamara, Kathleen. 1998. *The Currency of Ideas: Monetary Politics in the European Unio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Mundell, Robert A. 1961. "A Theory of Optimum Currency Areas." *American Economic Review* 51(4), 657-665.
- _____. 1962. "The Appropriate Use of Monetary and Fiscal Policy for Internal and External Stability." *IMF Staff Papers* 9(1), 70-79.
- Padoa-Schioppa, Tommaso. 1988. "The European Monetary System: A Long-term View." In Francesco Giavazzi, Stefano Micossi, and Marcus Miller, eds. *The European Monetary Syste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ubini, Nouriel. 2011. "Why Italy's Days in the Eurozone May Be Numbered." *Financial Times* (November 19).
- Sandholtz, Wayne. 1993. "Choosing Union: Monetary Politics and Maastricht." *International Organization* 47(1), 1-39.
- Snidal, Duncan. 1985. "The Limits of Hegemonic Stability Theory." *International Organization* 39(4), 579-614.
- Solomon, Robert. 1982.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1945-1981*. New York: Harper & Row.

- Tsoukalis, Loukas. 1977. *The Politics and Economics of European Monetary Integration*. London: Allen and Unwin.
- Ungerer, Horst. 1997. *A Concise History of European Monetary Integration: From EPU to EMU*. Westport, Connecticut and London: Quorum Books.
- Walsh, James I. 2000. *European Monetary Integration and Domestic Politics: Britain, France, and Italy*.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 Wihlborg, Clas, and Thomas D. Willett. 1992. "Optimal Currency Areas Revisited." In Clas Wihlborg, Michele Fratianni, and Thomas D. Willett, eds. *Financial Regulation and Monetary Arrangements After 1992*. Amsterdam: North-Holland.

Abstract

International Political Aspect of the Euro-Zone: A Critique of the Collapse-Down Scenario

Byoung-Inn Bai Kookmin University

The euro-zone is a politically motivated construct that aims to revise the dollar domination in international monetary relations. This characteristic casts doubts upon the expectation that the euro-zone is likely to collapse due to the current crisis. While it is true that the euro-zone does not satisfy the economic pre-conditions for the optimal single currency area, which is the basis for the collapse-down scenario, the international political motivation behind the European monetary integration has made economic deficiency less problematic for the European countries. To the extent that European countries still acknowledge this international political motivation, it is improbable that the collapse-down scenario will come to be realized. Instead, as the history of the European monetary integration has demonstrated, the current crisis and the disputes thereof among the involved European countries will lead to a further institutional evolution in Europe, especially in the areas of fiscal and social policies.

Key Words | Euro-zone, European Monetary System (EMS), European Monetary Union (EMU), Financial Crisis, Fiscal Crisis

